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 009 | 2021. 11. 01.

한반도 종전선언의 배경 및 진실성 그리고 나아갈 길
방호엽

한국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나태종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군철수가 주는 교훈
이영석

한반도 종전선언의 배경 및 진실성 그리고 나아갈 길

방 호 엽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위원)
(향군 안보교수)

배경 및 의도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로서 정치적 선언을 의미한다. 그래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자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부터 종전선언을 제안하였다. 이는 선 종전선언으로 정치·군사적인 대결상태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해 나가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비핵화 조치와 남북교류협력의 발판을 삼아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의 기반을 다지는 데 그 배경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종전선언에 대한 정치적인 배경을 모색하는 행위를 전개해 왔다. 그래서 북미회담 전에는 먼저 미국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다가 지금은 선제조건을 달고 있다. 즉 미국은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화와 교류전에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비핵화 문제는 자신들이 핵 보유국가로서 기존 핵 보유와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의 행위를 문제 삼지 마라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의도의 진실성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UN 연설 이후 바로 북한 리태성 외무상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7시간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좋은 발상”이라는 전제하에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함께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나 이어지는 담화로 입장을 밝혔다. 이를 보면 과거와 다른 형태의 특징이 보여진다. 즉, 리태성 외무상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단초”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담화에서는 더욱 전향적인 입장으로 “남북이 서로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개, 남북 정상회담 등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북한이 불과 이틀 사이에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인지 검토”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다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때를 놓치지 말고 논의해 보자”는 변화를 보였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선의 개통을 지시하고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는 없지만, 남조선이나 미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이고 자위적이며 의무적인 권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자체’라는 말로 미사일 시험 등의 도발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의도의 진정성은 대화를 하기 전에 제재완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역할을 마련하고, 전쟁이라는 필연성에 비핵화의 방향을 핵군축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숨겨진 저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 주변국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비핵화부터 진행하면서 북한의 진실성을 보며 종전선언으로 나가자는 의도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비핵화는 지지 하지만 대북제재를 먼저 풀어주면서 비핵화의 수순을 밟자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할이 미국과 상반됨으로써 진정성 있는 역할이 기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모습은 서로 다른 진실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나아갈 길

따라서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종전선언이 우선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남·북·미·중 간에 조율하는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상태를 보면 이제 탄두소형화 기술을 발전시켜 전술핵을 실어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완성해 나간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다양한 핵 공격능력을 구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종전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남북한의 교류협력여건에 목매는 모습을 보일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한·미·중 간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구체적인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雙軌並行)’과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의 추진 중점을 서로 공유하고 최종목표를 맞추어 나가는 협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여건을 서두르지 않으며 상황에 맞는 추진 중점을 수립하며 북한이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한 억제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핵보유국 노력은 현실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 여부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계획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 보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핵 공격을 하며 또 다른 도발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체제유지를 위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핵 공격을 억제하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전략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핵은 핵으로만 억제가 된다는 논리에 맞게 준비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북한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상황에 따라 철저하게 ‘강온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한국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나 태 종

(충남대학교 교수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

최근 정치권과 국방 및 안보 관련단체 주관으로 병역제도의 전환 및 적용에 관한 논의와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국방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군 인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군 인력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는 군내외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징병제 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과거에도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고, 현재 최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는 물론 미래의 통일한국에서도 평가와 판단의 우선순위가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인구감소 추세와 선진국의 병역제도 전환 추세

「2020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9세로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1982년에 1,421만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 기준 854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5년이 되면 군 복무 예비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18세 이상 청소년 인구의 감소폭은 -2% 수준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징집 가용인원의 감소와 함께 단기복무, 중기복무,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사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군사분야의 혁신을 통해 전근대적 의미의 병력위주 부대구조를 탈피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 전반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구성원의 확보와 선발에 필수요소인 병역제도 면에서 볼 때 선진국일수록 징병제 보다 모병제를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모병제 병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미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거나, 모병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로의 개편 추진

우리 군이 저출산에 따른 병역이행 자원의 현저한 감소에 대비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병력집약형 인력구조를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로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개병제(징집제) 병역제도를 유지하되 모병제(지원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군 구성원의 질적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수요가 점증하는 해군·공군·해병대 병사의 모집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군 복무 중 기술교육을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께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스라엘군의 병사들이 군복무 기간에 기술을 익히고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다음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루는 인력관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도 발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대구조의 첨단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군은 제한된 국방예산을 활용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첨단 과학기술군이 아닌 병력 위주의 부대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전체 병력의 규모에 상응한 전투력 발휘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주요전투의 교훈을 분석하여 미래전장에서 발생 가능한 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전투국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정 감시 및 지휘통제 능력을 보강하고 기동성과 정밀타격 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간부중심 인력구조, 민군복합 인력구조 설계 및 추진

급변하는 미래의 전장환경을 극복하고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원을 장교와 부사관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력구조를 설계하여 간부 중심의 부대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각 군별 간부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되, 고급장교의 비율은 다소 줄이는 반면 부사관의 비율은 증가시켜 이른바 창끝부대의 전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사관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단기복무(의무복무) 부사관의 비율을 줄이고 장기복무 부사관의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하며,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한 검토 및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간부들의 전문성과 숙련도 제고 등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부대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초급 및 중간 간부들의 부대 관리 능력과 리더십 역량 발휘 미흡으로 지적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간부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에 의한 인성교육, 리더십 진단 및 역량 발휘, 양성평등 교육, 직업 윤리의식 강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국방분야에 민간인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시설관리, 훈련장관리, 급양관리 등의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민간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군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 경력을 가진 제대군인과 민간의 취업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선진국일수록 군 인적자원의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데 있어 장비와 무기체계의 첨단화는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투력의 발휘는 첨단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숙달여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력 위주의 인력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전문성이 구비된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주는 교훈

이 영 석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원인과 철군을 결정한 이유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국방부 건물에 대한 동시다발의 자살테러를 빌미로 같은 해 10월 7일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20년 동안 전쟁이 이어졌다.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알카에다 조직을 파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국의 피해도 컸다. 미군 사망자는 2천 3백여 명과 부상자 2만여 명에 달했으며 예산 또한 약 2조 달러가 투입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 등을 쏟아 부었지만 미국이 기대했던 효과는 이루지 못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에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여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과 중국 등을 견제하는 것, 탈레반이 승리할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민족인 파슈툰족과 파키스탄에 있는 같은 파슈툰족과 결합하여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으나 미국은 철군으로 결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4월 14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미군이 완전히 철군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분명한 목표로 전쟁에서 그 목적을 달성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군의 주둔을 연장하거나 확장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정말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목적을 달성했을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은 세계 최강 국가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 설립이 불가능했던 이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불신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우선 목표는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에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단 한 번도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경험이 없었다. 더구나 부족(部族)국가 중심의 사회로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많았다. 특히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오랜 내전으로 국민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둘째, 모든 면에서 수도인 카블과 지방의 격차가 극심했다. 카블만 벗어나면 전기 공급은 물론 도로도 포장되지 않은 농촌과 산악 지역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다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민족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문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과 자유 존중 등 자유 민주주의의 의식이 부족했다.

셋째,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으나 지방보다는 대부분 수도인 카블 위주로 투자되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을 지지하는 주요 인사들이 독식하는 상황이었다.

넷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대부분 외국군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탈레반 등 게릴라들을 제압해도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자원이 충원되므로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다섯째, 아프가니스탄 군인의 자질 문제이다. 미국이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군은 물론 국가안보군은 부패가 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 이들이 군대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애국심이 아니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여섯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탈레반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러 온 것임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마찰이 생겨 이로 인한 불신이 쌓이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곱째,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자주국방 의식 부족이다.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식보다는 민족 또는 부족의 이익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인해 피·아 구분의 인식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철군을 결정했다고 본다.

미군 철수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다는 소식에 세계가 놀랐다. 특히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미군 철수를 통해 교훈을 도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확고한 한미동맹 강화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인 마크 티센은 “만약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빠르게 붕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미군 철수가 6·25전쟁이 발발한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고한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론 통일이다. 아프가니스탄의 패망도 자세히 살펴보면 민족과 부족(部族) 그리고 종교로 인한 국론 분열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역시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올바른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관 확립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저조한 국가 중에 하나로 감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다른 나라에 미국이 끝없이 주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아프가니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싸울 때”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철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안보 강화에 교훈이 되기를 희망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